

# 조직·인사·예산 국가경찰이 움켜쥐면 정착 못한다

### 광주·전남 '자치경찰제' 시행 1년 <하> '자치' 없는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 등 사무만 이양한 채 소속은 모두 국가경찰 조직 분리·인사권 보장 '이원화 모델' 자치경찰법 제정 서둘러야 새 정부 행정부 통합 경찰권 통제로 자치경찰 앞날 불투명 시각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2년째에 접어들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부실한 제도'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지방분권과 경찰권 분산이라는 취지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조직과 인사·예산 관련 권한을 국가경찰에 집중시키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국가경찰 사무 가운데 교통·생활안전 분야 등 일부 사무를 자치경찰에 이양하면서도 정작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경찰관을 국가경찰 소속으로 두는 지금의 '이원화 모델' 대신,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의 전환이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다. 3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을 구분하는 형식을 취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중앙의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예컨대 광주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의 사무는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나뉘

고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광주경찰청 사무는 이처럼 세가지로 나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 곳도 다르지만,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 소속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이원화 모델)도 논의됐으나, 조직은 그대로 두고 사무만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 채택됐다.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겹으로 드러나는 문제로는 자치경찰의 존재감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찰 사무 가운데 지역 교통·주인 생활 안전·지역 경비 등의 사무를 가려와 각 시도 자치경찰에서 시행 중이지만, 시민 체감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미흡한 권한 문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면서도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게 대안적인 평가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서 자치 사무를 보는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고, 예산(광주시 자치경찰위 2022년 예산은 40억원 수준)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시행 1년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대정부 건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즉시 실천 과제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 전환(112치안종합상황실→생활안전과)과 자치경찰 위 내 승진·징계위원회 설치, 경무관(자치경찰부장) 승진 정원(TO) 배정 등을 요구했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중점 과제로는 '지방자치경찰법' 제정을 통한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분리(이원화 모델)를 건의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적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특별회계' 설치와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건의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제도가 부실하게 설계되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승진·전보 인사권, 징계권도 없이 자치경찰 사무를 이끌어

가고 있다. 경찰 통제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라며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하는 '경찰국'(가칭)이 자치경찰제의 앞날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줄곧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4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열린 '중앙 통제'에 방점을 둔 행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확정되면서,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힌 자치경찰의 권한 강화에 장애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오버랩된 상황이다. 이원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 지원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통해서 연구해볼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CC 빅도어시네마에 몰린 인파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야외무대에서 'ACC 빅도어시네마' 행사가 열렸다. 관람객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 사이를 넘나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형 단일임금체계 만들어 달라”

### 7만 광주사회복지사 새 시장에 요구

7만 명이 넘는 광주시 사회복지사들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장에게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일 민선 8기 광주시장에 바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월말 기준 광주지역에는 총 7만2592명의 사회복지사(1급 6997명, 2급 6만5454명, 3급 141명)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이들은 “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복지예산은 2조62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부

분의 예산(1조648억, 복지예산의 40.5%)이 사용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뒷받침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설명이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과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인천, 제주도 등은 수년 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광주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광주복지 복합 플랫폼 공간 건립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위기지원센터(인권센터) 설치·운영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수능 11월 17일에...EBS 교재 연계율 5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EBS 수능 교재와 연계율이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을 11월 17일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번 수능은 2022학년도 제제와 기조가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EBS 연계율은 2021학년도까지 70% 수준이었으나 지난 수능부터 문항 수 기준 50%까지 축소됐다.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것도 지난 수능과 같다.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남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배출 평가

광주시 남구는 지난 1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작했다. 3일 밝혔다. 남구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를 평가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선 공동주택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남구 지역의 50~299세대 이하 공동주택 118곳,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7곳이며,

평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평가 지표는 전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우수 실천 사례(20점), 공동주택 내 감량화 시설 운영 여부 등 세가지다.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공동주택 6곳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